

대구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검토 경위

- 발의일자: 2023. 6. 1.
- 발 의 자: 김종일 의원 외 2명
- 회부일자: 2023. 6. 7.(의안번호 제452호)
- 검토기간: 2023. 6. 7. ~ 6. 13.

2. 주요 내용

-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목적(안 제1조~제2조)
-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(안 제3조~제4조)
-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·운영(안 제5조~제9조)
-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
(안 제10조~제17조)
- 탄소중립의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(안 제18조)
- 국가 등과의 협력 및 의회 보고(안 제19조~제20조)
- 내용상 중복되는 관련 조례의 폐지(안 부칙)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탄소중립기본법」 제4조, 제12조~제13조, 제22조, 제26조, 제30조~제33조, 제36조, 제43조, 제67조, 제75조, 제78조
- 「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

나. 입법예고: 2023. 6. 8. ~ 6. 13.(접수된 의견 없음)

다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4. 검토 의견

가. 법적 근거 및 타당성

- 본 조례안은 최근 제정된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면서 구와 구청장의 법적·제도적 책무를 빠짐 없이 수록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및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지역의 탄소중립정책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타당성을 두루 갖추었다고 판단됨.

나. 조문별 주요 검토 사항

- 환경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기본 조례 표준안을 제공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상위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만한 거의 모든 사항이 열거되어 있으므로 지역별 사정을 고려한 취사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,
- 본 조례안에서는 그 가운데 구와 구청장의 법적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안 제3조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, 안 제4조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보고서 작성 및 공개를, 안 제20조는 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 등에 대한 의회 보고를 각각 명시함으로써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하였다고 할 수 있음.
-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대구광역시 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, 이 위원회 설치에 구의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탄소중립 정책 및 환경 정책에 대한 심의·의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시책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.

- 그 밖에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탄소중립 추진 및 기후위기 대응 등과 관련된 각종 시책 추진 또는 광역적 대처에 관하여 구청장의 노력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음.

다. 종합 의견

-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광범위한 의무 사항 및 선택 사항 중에서 우리 구의 사정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범위 내의 사항을 중심으로 적정하게 구성하였다고 판단되며, 집행기관에서는 2030년으로 설정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연도를 감안하여 우리 구의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활성화를 앞당겨 실현하는 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